

< 2013년 한국정부학회 추계 학술대회 >

고용률 제고를 위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내실화 방안

2013년 10월 11일

경일대 남병탁 교수

목 차

- I. 서론
- II. 고용률 70% 로드맵
- III.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
- IV. 로드맵에 따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내실화 방안
- V. 마무리

I. 서론

- □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
- ○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를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지난 6월초 '고용률 70% 달성을 위한 로드맵'과 '창조경제 실현 계획'을 발표하였음.
- ○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도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
- ○ 한편 지역에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공시제는 동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정책실현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
- □ 논의의 목적
- ○ 본고에서는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정리하고 동 로드맵이 미칠 영향에 따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

II. 고용률 70% 국정 로드맵

- 1. 왜 고용률 70%인가?
- □ 고용률 = 취업자 / 생산가능인구 * 100
- ○ 70%는 OECD기준 취업자 / 15-64세 생산가능인구 * 100
- ○ 국정 중심지표를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
- □ 고용률 70% = GDP 3만불
- ○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들의 고용률 70% 내외를 기록하고 4만달러 국가들의 고용률은 74% 정도
- ○ 즉 고용률과 국민소득이 비례관계에 있고 고용률 70%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
- □ 고령화 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
- ○ 생산가능인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노동력부족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며 세대 간 부양부담 완화
- □ 일자리는 국민행복의 전제조건
- ○ 일자리는 삶의 기반이자 자아실현 및 행복의 전제조건임

○ 2. 로드맵 수립 배경

- □ 고용률이 '03년 이후 10년째 63~64%대에서 정체
- ○ 선진국에 비하여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
- - 여성 고용률은 2011년 기준 53.1%로 OECD 69.1%에 비해 16%p나 낮고 15-29세 청년층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하락하여 2012년 기준 40.4%에 불과
- □ 90년대 이후 고용없는 성장
- ○ 수출·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90년대 이후 대기업의 성과가 국내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았고,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과 저임금으로 격차 지속 확대

- □ 남성 전일제 중심의 근로문화
- ○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,116시간으로 OECD 평균을 420시간 초과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유연근로 활용비율은 선진국의 1/10 이하에 불과한 남성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창출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
- □ 취업애로요인의 구조화
- ○ 장시간 근로와 보육서비스 부족 등으로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, 청년의 고학력화로 노동시장 진입연령 상승,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취업애로요인이 구조화되며 노동시장 참여가능함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는 규모가 300만명을 상회
- □ 주요 정책의 일자리창출 연계 미흡
- ○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어 왔으나 고용창출 및 일자리 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여성, 청년,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정책이 맞춤형으로 체계화하여 제공되지 않아 구조적 문제 해결에 미진

○ 3. 주요 내용

- ☐ 고용창출 패러다임 전환
- ☐ 고용창출시스템의 중심축을 남성·장시간 근로(제조업·대기업)에서 여성·창조경제(서비스업·중소기업)로 이동
- ☐ 장시간 근로해소를 통한 일·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시간 선택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
- ☐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자리 창출의 비전

- ☐ 20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(연 47.6만개) 창출
- ☐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 제·개정과,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 과제 추진 및 200시간의 실 근로시간 단축 추진

- ☐ 첫째,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
- ☐ 창업 활성화, 신직업·신산업 발굴육성,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, 서비스산업 선진화,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

- ☐ 둘째,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
- 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,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·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

- ☐ 셋째,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
- ☐ 여성, 청년, 중장년층이 다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,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적극 지원
- -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,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, 청년 조기노동시장 진입, 장년 더 오래 일하기

- ☐ 넷째,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
- 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강화와 차별해소를 통한 고용의 질 제고 및 정부의 일자리창출 책임성 강화와 고용 친화적 정책기반 조성
- -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 의무화, 기업 고용형태 공시제, 재정사업의 고용영향평가 실시, 노사정위원회 개편

<주요 정책과제의 기본 방향>



4. 기대효과

□ 주요 대상별 취업자 증가(대상별 수치는 중복 집계)

취업 애로요인 해소		새로운 일자리 창출
- 스펙초월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 -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- 한국형 일·학습 듀얼시스템 - 직무능력표준(NCS) 중심체제 - 대학 일·학습 연계 - 근로장학금 등 - 선취업/후진학 지원 강화	청년 48.6만명	- 창업/창직 -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체계 - 강소, 중소기업 -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- 중소기업 미스매치해소 - ICT, 문화, 관광, 스포츠 - 고부가가치 창조 서비스업 육성 4대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 일자리 확대 (2만개) - 공공기관 3% 청년의무고용
-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- 연장근로에 휴일근로 포함 -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 - 육아휴직/보육서비스 확대 - 자녀육아휴직 확산 -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대 - 직장/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-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	여성 165.4만명	-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-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-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 세제 사회보험료 한시적 지원 - 돌봄 등 사회서비스업 -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- 보건 의료 서비스업 - 서비스산업 발전방안
60세 정년제 시행 - 정년연장지원금 지급 - 추가 연장 시 고용지원금 - 은퇴 후 생애 재설계 지원시스템 구축 - 생애 재설계 컨설팅 - 파견업종 합리적 조정	장년 144.1만명	-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- 귀농 및 사회공헌 - 돌봄 등 사회서비스업 - 사회적 경제 - 사회공헌일자리 점진적 확대 - 사회적기업 위·창업 지원 강화